


**특허청**


**특허청**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                                                                                                 |                    |              |
|-----------------------------------------------------------------------------------|-------------------------------------------------------------------------------------------------|--------------------|--------------|
| 문 의                                                                               | 기획조정관<br>창조행정담당관실                                                                               | 과 장 목성호<br>서기관 정진욱 | 042-481-5062 |
|  | <b>2015년 6월 29일(월) 조간</b>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br><b>인터넷매체</b> 는 <b>6월 28일(일) 낮 12시 이후</b> 게재 바랍니다. |                    |              |

## 특허청, 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58개의 사업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청취에 나선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청 주요 업무인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에 관한 통지서와 결정서를 심사관·심판관의 명의로 발송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사업에 대하여도 특허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하여 왔다.

\* 정부3.0 :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4대원칙을 기반으로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혁신의 노력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사업은 ▲ 주요 국정현안(정부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책실명제의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율을 50%이상 늘였고, 그 결과 지난해 44개보다 확대된 58개의 대상사업이 실명제 대상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특허청은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 개선사항을 듣는 의견 수렴 창구역할로 정책실명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과 사업이력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라고 밝혔다.

2015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 정부3.0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붙임 : 정책실명제 개요

## □ 추진 목적

-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 참여자의 실명 및 의견을 기록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의 책임성을 향상

- ❖ 방위사업청 정책실명제 실시와 관련, 타 부처에도 도입 검토(VIP, '13. 5)
- ❖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13. 8)
- ❖ 지자체로의 확산과 함께 주요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등 중앙부처부터 제대로 실시되도록 할 것(VIP, '14.2.7.)

- (관련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  
內 관련 규정(책임관 지정, 중점관리 대상 선정, 평가 등) 신설('14.2.18.)

\* 행정자치부(행정제도혁신과), '15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시달('15.3)

## □ 정책 취지

-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타 기관, 민간 포함)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 적용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 추진 경과

- 종이문서(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등) 중심의 정책실명제 도입('98.7)
- 전자문서 중심의 기록 관리를 통한 정책실명제 기반 구축('97.1)  
\* 결재·메모보고시 관련자 실명과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관리(온나라 시스템)
- 정책실명제 법정근거 보강 등을 통해 관리체계 제도화('13.8~14.2)